

검찰, 공수처에 '尹 내란 혐의' 이첩 착수...“공유 범위 협의”

기록 정리해 넘기고 軍수사 집중...공수처,尹 2차 출석 요구 전망 尹 구속판 기한 등 법령 미비...수사후 검찰 또는 특검에 넘겨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이진동 대검찰청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저히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고위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사 등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대검 관계자는 자료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에 비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0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주·전남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방침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

만, 검찰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이첩을 거듭 요청했는데 이첩 이후 검사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기록 검토 등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검찰과 수사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에 조사가 이뤄질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령처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려다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당치 않아”

탄핵심판 우편물 미수령엔 “할 일 할 것...탄핵심판 직접 변론 의향”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는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상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인사 14명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라고 밝혔다. 김홍일 전 방 송통신위원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에 아직 선입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입견을 내지 않는 것이 수사 지연

전락이라는 지적엔 “시간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숙고를 해서 계엄선 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나 증거 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겨냥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김용현, 계엄날 오찬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

민주 “계엄 직전尹주재 안가 만난 김용현·박안수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현은 12월3일 오전 11시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 자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처장인 방정환 준장이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사무실로 이동했다”며 “방 준장은 물론 휴가를 승인한 조창래 국방부 정책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3일 오전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민간인 양모씨”라며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주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가에서 만찬을 할 때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가 관리 담당인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소환해 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직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오늘 언급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의 도는 없다. 본인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

707특임단장 “실탄 1천920발 쉐겨 출동”

“상부 지시 훈련중 출동...계엄 선포 방송 보고 인지”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천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잠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

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천920발을 쉐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쉐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천발·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 적은 적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가결된 후 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후부터는 별도의 비상 대기 없이 평소처럼 부대를 정상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1면 ‘속속드러나는 軍무장 규모’서 계속

계엄군은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로 완전 무장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제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최소 1만발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천900발과 공포탄 1천900발, 수방사(211명)는 실탄 5천48발과 공포탄 2천900발을 불출했다.

하지만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무장 수준이 확인될 경우 실탄 규모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월단체는 “만여발의 실탄을 준비하고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 계획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 같은 만행은 1980년 광주에서 군부 독재가 국민을 학살했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3차례에 걸쳐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얘기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위선적 행동이었다”며 “오월 정신을 우롱해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불쾌했다”고 비난했다.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내란 실행 혐의...現정보사령관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12·3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빙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아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부대(HID)를 운용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전날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도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을 선별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